

쓰레기 대란을 피하는 법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대란이 예고된다.

현재 고양특례시가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은 2010년 지어진 백석소각장이 유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저서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결의 쓰레기』

쓰레기 직매립 금지...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 이후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쓰레기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고양특례시도 예외가 아니다. 고양특례시는 매일 300톤~310톤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 용량은 230톤에 불과하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소각장 용량은 확대되지 않고,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한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처럼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2027년이 되면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 제3-1매립장(인천시 서구)은 수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체결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4자 합의에 따라 현 매립지가 종료될 경우 나머지 땅을 매립지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2021년 두 차례 했던만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어 무산되었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것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쓰레기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쓰레기가 전혀 없는 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 도시에서 쓰레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온 지역에서 쓰레기를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장을 무조건 배치하기보다 소각장이 도시 내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 사람들이 찾아오는 랜드마크형 시설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원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의 사랑 받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

무조건 안 된다는 편견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실리를 따진다면, 소각장 설치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도권 매립지 제3-1 매립장 전경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은 생활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 봉투 그대로 매립하면 안 되고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지자체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는 조속히 안정적인 소각용량을 확보해야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하루 650톤 용량의 소각장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소각장 입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소각장 설치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소각장에 대한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야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 하지만 최신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장은 주민들이 우려할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대규모 소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각장 운영경험과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소각장 운영을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동굴뚝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자동굴뚝장치는 운영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하다. 주민들 눈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영터리로 쓰레기를 태울 것이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도시 지역 소각시설 주변 주민대상으로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결과 건강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 소각장을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으로 인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소각시설을 제외하고 현대 소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다. 따라서 과도한 공포에 짓눌릴 필요는 없다.

